



# 목 차

## 2016년도 반부패 청렴 업무 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2016. 5.



<b>I. 교육훈련 개요</b>	
1. 목적 및 교육기관 소개 .....	1
2. 교육훈련 세부일정 .....	4
<b>II. 교육훈련 내용</b>	
1.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	5
2.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	9
3. Public Procurement, Vulnerabilities and Best Practices ..	13
4. [기관방문]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검찰청 ..	19
5. Fraud Prevention - Tools and Concepts .....	23
6. [기관방문]오스트리아 부패방지국 .....	27
7. Compe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 .....	29
8. [기관방문]UN마약범죄국(UNODC) .....	35
9. Organizational Integrity .....	41
<b>III. 오스트리아 정책의 국내 적용 방안</b>	
1~8 국제 반부패 정책 적용 방안 사례 .....	49~72
*붙임 : 참가자 현황 .....	73

# I. 교육훈련 개요

## 1 목적 및 교육기관 소개

□ **과제명**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청렴 담당자 교육훈련

### □ 목적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담당자에 대한 국제 반부패 교육을 통해 **대상 기관의 청렴역량 견인**
-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접점을 넓혀 청렴 이슈 관련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고, 청렴 선진국의 **우수 시책과 경험 공유**

□ **기간** : '16. 4. 20. ~ 4. 28.(7박 9일)

### □ 교육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30km 떨어진 락센부르크(Laxenburg) 소재

####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UN부패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 이행 지원** 목적으로 설립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15년 기준 77개 국가 및 국제기구 참여)
  - ※ '11. 3. 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 가입서명('10. 12. 29.), 비준서 기탁('11. 12. 15.), 협정 국내 발효('12. 2. 13.), 협력 MOU 체결(권익위, '12. 3. 27.), '13년 기여금 납부, '14년 과장급 파견
- **주요 업무**
  - 부패방지 관련 세미나·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훈련 운영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등

##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소개

### ○ 기관 개요

- **성격** : 국제기구

※ '11. 3. 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가입서명('10. 12. 29.), 비준서 기탁('11. 12. 15.), 협정 국내 발효('12. 2. 13.), 협력 MOU 체결(권익위, '12. 3. 27.), '13년 기여금 납부

- **개관** : 2010년 10월

- **위치**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 ○ 설립배경

- UN부패방지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국제기구가 필요

※ UN총회(64/237, '09.12.24), ECOSOC총회(2009/22, '09.7.30), UN반부패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3/2,3/4, '09.12.1) 의결 등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 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UN 마약범죄국(UNODC), EU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 ○ 설립목적

- 반부패 분야에 대한 총체적·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 반부패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과 공유

- 부패방지 업무와 부패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세계 반부패 행위자 간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 촉진

○ 조직 구성

- 당사국총회(Assembly of Parties)
- 집행이사회(Board of Governors)
- 국제수석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 국제학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
- 학장(Dean)
  - ※ Martin Kreutner(2012~현재)
- 사무국 : 학술기획국, 교육운영국, 행정국
- 직원 수 : 약 40명
  - ※ 정부 파견직원 : 오스트리아, 그리스, 나이지리아, 한국, 루마니아 출신

○ 주요 업무

- 세미나와 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과 관련한 개인 대 개인(peer-to-peer) 간 교육 및 훈련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 각 분야의 반부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 교육 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학위 부여
  - ※ 학습모듈 :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부패와 경제, ③정치와 부패, ④기업과 부패, ⑤반부패와 법률, ⑥(반부패)법집행, ⑦(부패)예방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정부, 민간, 국제,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및 반부패 분야 연구경력을 갖춘 학자
- 국제반부패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반부패 실무진을 위하여 매년 7월 개최되는 2주 단기과정
- 기타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

**2 교육훈련 세부일정**

일자	교육 내용	비고
4.20.(수)	▶ 인천 출발 ▶ 비엔나 도착	
4.21.(목)	▶ <Session 1> ①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②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The UNCAC)	IACA
4.22.(금)	▶ <Session 2> ① Public Procurement, Vulnerabilities and Best Practices ② Visit to Austria Public Prosecutors' Office for White-Collar Crime and Corruption (WKStA)	IACA WKStA
4.23.(토)	▶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 방안 강구	
4.25.(월)	▶ <Session 3> ① Fraud Prevention (I) Tools and Concepts ② Fraud Prevention (II) Tools and Concepts ③ Excursion to 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 of the Republic of Austria (BAK)	IACA BAK
4.26.(화)	▶ <Session 4> ① Compa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 (I) ② Compa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 (II) ③ Excursion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 (VIC)	IACA UNODC
4.27.(수)	▶ <Session 5> ① Organisational Integrity (I) ② Organisational Integrity (II) ▶ 비엔나 출발(18:40)	IACA
4.28.(목)	▶ 인천 도착	

## II. 교육내용

### 1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 ◇ 일시 및 장소 : '16. 4. 21.(목) 13:3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강사 : Mr. Martin Kreutner (Dean, IACA)

#### □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것은?(Corruptive behaviour)

- (untrustful behaviour) 신뢰성이 없는 행위
- (unethical behaviour) 비윤리적 행위
- (social deviant behaviour) 반사회적 행위
- (criminal behaviour) 범죄 행위
- (human rights violation) 인권 침해

#### □ 부패로 인한 비용(What Is the Cost of Corruption Today?)

-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를 뇌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경 간 부패, 탈세금액도 연간 1~1.6조 달러에 달함
-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부패금액도 연간 5000억 달러
- (지역비교) 아프리카 GDP의 25%, 아시아의 17%, 유럽의 6~7%
- (계약부문) 민간계약의 15%, 공공계약의 25%가 부패금액
  - 공공계약이 민간계약보다 부패로 인한 손실이 많은 이유

- ▶ 첫째, 공공계약에서는 아주 큰 돈이 투입되기 때문
- ▶ 둘째, 공공계약에서는 독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고
- ▶ 셋째, 국방관련 계약과 같이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
  - 최근에 부패 취약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인데 독점 부분과,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임

#### □ 부패의 정의

- OECD 협약에서는 부패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나,
- 보편적으론 부패를 '사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 하는 것 (the mis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

#### □ 부패발생의 3요소

- 권한을 위임한 주체(국가, 사회, 회사 등)
-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공무원, 직원 등)
- 어떤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객체(법규 위반 운전자, 인사청탁자 등)

#### □ 부패의 종류

- 크고 작은 부패(Grand and Petty Corruption)
- 공급측면의 부패, 수요측면의 부패(Supply and demand Corruption)
  - OECD 협약에서는 공급적인 측면을 주로 다룸, 기업처벌
- 능동적 부패, 수동적 부패(Active and Passive Corruption)
- 합법적인 부패, 불법적인 부패(By the Rules Corruption and Against the Rules Corruption)

- 합법적인 부패 예시 : 공공조달 입찰 시 특정 업체만 해당되는 자격을 입찰조건으로 정한 후, 공개 입찰을 할 경우가 합법적인 부패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 부패의 형태

- 뇌물(Bribery)
- 횡령(Embezzlement, Theft and Fraud)
- 직무상 부당취득(Extortion)
-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
- 정실주의(Favoritism), 족벌주의(Nepotism), 후견주의(Clientelism)
-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
- 부적절한 정치적 기부(Improper Political Contribution)

#### □ 부패척결을 위한 4가지 원칙

- 국제무대에서 부패가 이슈화된 것은 15~20년밖에 안되며, 법집행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전세계적으로 예방으로 향한 변화 강조
- 부패는 예방(Prevention), 교육(education), 억제·준수(repression), 국제적 협력(compliance)의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결

####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개요

- 1977년 :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시도한 종합적 법률 제정
  - 미국 해외뇌물방지법(FCPA) 제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
- 1990년대 :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전환 시기
  - 국제투명성기구(TI) 설립('93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95년)
  - 반부패 미주협약(OAS, '96년)
  - OECD 협약('97년) :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퇴치를 협약(뇌물 퇴치에 동의하기 시작)

- 유럽의회('97년) : 부패방지를 위한 4가지 노력(민법협약, 형법협약, 20개 기본원칙, GRECO(반부패국가연합))

- 부패방지 유럽연합 협약('97)

\* OAS 및 OECD 협약, EU 협약 모두 회원국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 □ 유엔반부패협약(UNCAC-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총 8장 71개 조항

#### □ 최근 부패 관련 개념 및 흐름

- 민간부문의 중요성: 윤리, 청렴, 진실성 등 강조
- 안보·보안문제

- 튀니지의 26세 무허가 노점상 청년이 부패한 경찰에게 상납할 형편이 되지 않아 시청 앞에서 분신한 사건 계기 '아랍의 봄'

- 유럽연합 안보전략 : 국가 실패를 다루는 주제의 첫 번째 이유가 부패

- 미국 :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국가의 부패가 안보를 해친다고 명시

- 인권문제

- 인권협약에서 부패를 다루고, 조항에 명시



[Session1]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IACA)

## 2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The UNCAC

- ◇ 일시 및 장소 : '16. 4. 21.(목) 15:3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강사 : Mr. Godwin Ocher (IACA)

### □ 부패발생 환경

- $M(\text{독과점}) + D(\text{재량권}) - A(\text{책임감 결여}) = C(\text{부패})$
- $O(\text{기회}) - PI(\text{개인의 청렴성 결여}) - PE(\text{직무분야의 도덕성 결여}) = C(\text{부패})$   
 ※ 독과점 상태에서 재량이 있으나 책임성이 없으면 부패 발생, 기회가 있는데 개인의 청렴성과 직무분야의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부패 발생



- \* Money + Discretion - Accomplish = Corruption
- \* Opportunity - Personal Integrity - Province Ethic = Corruption

### ○ 부패의 3요소

- Pressure(압력), Opportunity(기회), Rationalization(합리화) 이며, 3요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부패 발생

### □ 부패의 측정방법

- 부패 문제해결을 위해선 측정이 중요하며, 어떻게 수치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측정 도구 및 방법이 존재
- 양적인 데이터 측정
- 질적인 서술 기법
- 실생활의 사례 연구
- 도시, 국가 등 다양한 계층적 측정

### □ 부패의 측정도구

- 1세대 도구: 대중의 인식에 의한 측정
- 최근의 도구: 진단과 함께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제안
- 3세대 도구: 진단과 함께 행동을 제안하되 구체적 표적까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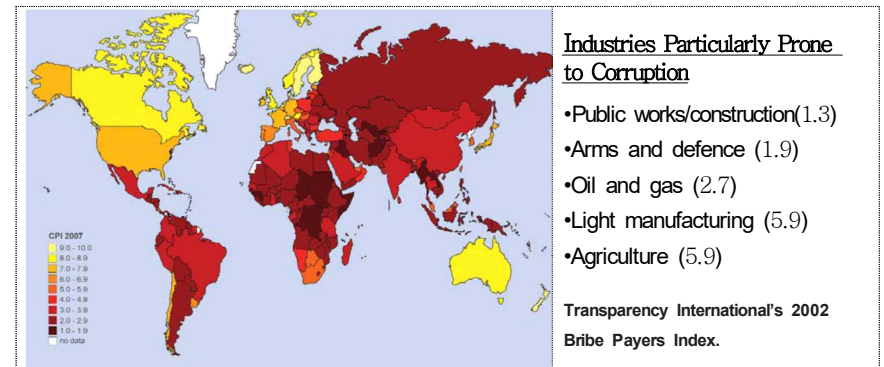
### □ 부패관련 지수

#### <세계의 주요 부패지수>

-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 World Bank
- ▶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GAC) Diagnostics- World Bank
- ▶ The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 MO Ibrahim Foundation
- ▶ The Global Integrity Index - Global Integrity
- ▶ Open Budget Index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 ▶ Drivers of Change assessments - DFID
- ▶ User's guide to Measuring Corruption - UNDP
- ▶ Cost-effectiveness and cost-benefit analysis of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ctivities - U4
-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World Economic Forum

### □ 세계 부패 양상

- 부패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음
- 가장 청렴한 분야는 농업, 가장 부패한 분야는 공공사업으로 조사



□ 우리나라의 부패 관련 지수 및 순위

TOOL	RANK	SCORE
부패인식지수(2015)	37/168	56/100
뇌물공여지수	15/28	7.9/10
금융비밀지수	28/71	54

□ 부패의 영향 및 비용

- 부패는 발전을 저해하고 모든 사회악의 원인이며,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는 특히 부패영향이 심각
- 부패로 인해 계약금액의 평균 10% 정도 비용이 추가 발생되고 공공계약의 경우 25%를 추가 발생
- 뇌물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가 지불되고 있으며, 범죄, 부패와 탈세로 인한 국경간 흐름도 연간 1조 6천억\$가 발생, 개발도상국의 민간분야 부패도 연간 5천억\$ 발생
- 부패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손실)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여 구조적으로 법·제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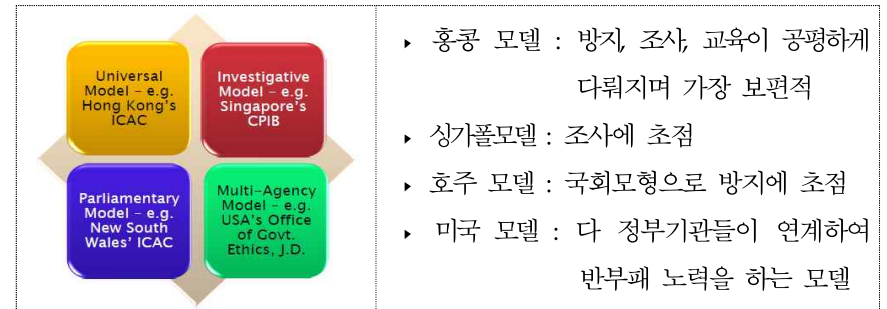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 2002년 : 기업의 회계조작 등 내부 통제 강화(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 : 기업회계개혁법)
- 2003년 : 부패 퇴치 및 예방 협약(아프리카 연합), UN반부패협약(UNCAC) 채택(10.31.) 및 서명회의 개최(12.9.: 국제 반부패의 날)
- 2004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약(UN Global Compact, 환경, 인권, 노동규칙, 반부패의 10개 원칙 준수), 반부패 유럽 파트너(EPAC)

- 2005년 : 반부패의 세계화(30개국 비준으로 UN반부패협약 발효, 12.14.)
- 2010년 :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금융관련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을 위한 미국 Dodd-Frank Act 법 발효, 영국 뇌물수수법 시행(UKBA)
- 2014년 : 유럽연합 부패 보고서 발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에서 반부패법률 제정

□ 국제 반부패 전략 및 정부기관 모델

- 반부패 협약 → 제도적 틀 → 예방, 강화, 교육



[Session2]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the UNCAC"(IACA)

### 3 Public Procurement, Vulnerabilities and Best Practices

- ◇ 일시 및 장소 : '16. 4. 22.(금)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강사 : Mr. Schnitzer

#### 1. 공공조달의 개요

- (공공조달이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 서비스, 용역 등 구매를 수행하는 체계
  - 공공조달(공적계약)은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이므로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통해 계약할 필요
- 공공조달 부문의 규모
  -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전세계 GDP의 15% ~ 30%를 차지
    - EU 공공조달 시장은 전체 GDP의 18%(12년 24,000억 유로)
    - 미국 시장은 2012년 4,500억 달러 규모
- 공공조달 부패 비용 및 취약분야
  - 공공조달에 있어서 공공계약금액의 20~25%의 가치가 부패로 상실
    - EU는 회원국의 부패비용이 매년 1,200억 유로에 이른다고 추산
      - ※ 출처 : EU 위원 맘스툼, 2013.5월, 반부패 세미나 스웨덴 괴테보르크
  - (취약이유) 굉장히 큰 금액이 연류, 복잡한 생리가 작용하며 자유재량권이 많아 부패 개입 여지 많음
  - (취약분야): 공공공사(도로, 터널, 공항), 제약, 의료 장치 등

#### □ 공공조달의 진행단계

##### ○ 1단계(입찰 전 단계)

- 정부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련 요구되는 기술 등을 확인하고 결정
- 계약 진행절차의 구조화 : 입찰 진행일정, 사전적격심사 포함여부, 단계별 절차, 적격 응찰자 제한, 의사소통 방법 등 구조화
- 공공조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수립

예) 축구단 건설관련 입찰시 조달담당자가 조건을 정할 때, 최근 2년 이내에 축구장을 건설한 적이 있어야 한다고 제한한다면 소수의 응찰자만 해당되게 됨

##### ○ 2단계(입찰 단계)

- 입찰공고(입찰 서류 및 입찰 평가서)
- 개찰 및 입찰자를 평가하여 계약 당사자를 선정
-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성립

##### ○ 3단계(입찰 후 단계)

- 계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행위
- 성과를 내고 계약이행 단계에도 부패 개입여자 많음

예) 랩탑 제공 입찰자가 1000개를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으나, 800개만 제공하고 조달담당자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 □ 공공조달의 추진방법

##### ○ 공공조달 추진방법 선정기준

- 사전 공시를 여부, 분할발주 및 통합발주, 협상 용인여부 등 결정



- 공공조달 세부항목 기준 결정
  - 추정계약가격, 응찰자의 수, 적정 재화, 용역, 공사의 복잡성
  - 공공조달 세부기준 선정은 특정입찰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내세워 낙찰 되도록 하여 부패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개경쟁입찰
  - 정형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조달방법으로 해당분야 기업을 모두 입찰가능하며, 낙찰은 보통 최저가로 결정되므로 공공조달 추진 방법 중 가장 투명하고 경쟁적인 요소가 강함
  - 입찰서는 상세한 사양과 계약문구를 포함하고 협상은 허용되지 않음
- 제한경쟁입찰
  - 사전 공고를 통해 자격을 정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이 참여
  - 적격자 선정은 최소한 또는 선택된 요소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문사항이 특별하고 복잡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공조달기관과 입찰참여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
- 단일공급자
  - 거래금액이 작거나, 시급한 경우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입찰방법으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단일공급자 방식을 실시
    - ※ 국방 분야에서 첨단무기 도입 등에서 자주 사용 됨.
  - 단일공급자 결정으로 인하여 부패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 □ 공공조달의 주요 부패유발자

- 뇌물 제공자
  - 응찰자, 컨소시엄 파트너, 하도급자, 공급자
- 뇌물 수령자
  - 공공조달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간부공무원으로서 공공조달 진행 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발생원인 : 공공조달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하여 뇌물제공 등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 부패행위 발생
 

(예시) 축구단 건설관련 입찰시 제한경쟁입찰이라면 응찰자가 공무원을 찾아가서 2년 이내 축구장 건설이력 조건을 3년으로 조정
- 공공조달 관련 공무원이 연관되지 않아도 입찰 당사자 끼리 비경쟁(담합)을 통해 예정가격 및 입찰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음
 

(예시) 축구단 건설관련 입찰시 세 업체에서 담합을 통해 1조 유로의 비용이 드는 공사 비용을 a(1조 1억 유로) b(1조 2억 유로) c(1조 3억 유로)로 경쟁한다면 결국 a 업체의 1조 1억유로 업체가 낙찰 되게 되어 공적 자금 1억유로가 없어지게 됨

## 2. 공공조달의 부패방지 장치

### □ 공공조달의 국제적인 부패방지 장치

- 국제상거래위원회 모델법
  - 정부가 사용가능한 구속력 없는 모델로서 국제적 우수사례에 기초
- WTO 정부 조달 협약
  - 공공조달을 국제 무역에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WTO와 40개이상 WTO 가입국에 구속력 있음

- EU 공공조달 지침 : 국가법으로, EU 국가의 지역적 법의 일부
- UN 반부패 협약 : 국가적인 공공조달 법제화의 프레임워크 제공

□ 공공조달의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조건

- 좋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 법정 또는 독립기관에 의한 효율적 감독 매커니즘
-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규제 준수 프로그램
  - 조달에서 문제 발생시 기술적, 조직적, 개인적 조치를 통해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
- 부패행위자는 공공조달 계약에서 제외
- 조달인력의 전문화

3. 공공조달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원칙

□ 건전한 공공조달의 중요원칙

- 투명성, 경쟁, 차별금지, 경제성과 효율성, 객관성, 집행가능성, 기타

□ 투명성 확보

- 모든 대상자에게 조달기회를 제공하고 공고를 통해 준수사항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진행결과를 공개
- 진행 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경쟁강화

- 공공조달 시 둘 이상을 응찰자로 하여 경쟁
- 지불하는 돈에 대한 최고의 가치확보를 위한 핵심요소
  -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품질
  - 혁신을 위한 주요 동인

□ 객관성 확보

- 객관성은 편향, 편경 주관적 평가를 줄이는 의사결정의 목적
- 비차별, 동등한 대우, 진실성(윤리적 행동),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체계

4. 공공조달에서의 부패 리스트

입찰 전 단계	입찰 단계	입찰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없는 입찰</li> <li>• 찌개진 계약들의 합산</li> <li>• 합법의 제단과 한 회사만의 기준 선택</li> <li>• 불합리한 시간제한</li> <li>• 이익충돌의 무감독</li> <li>• 해명 요구에 대한 모호한 답변</li> <li>• 부정당 업체 참가여부</li> <li>• 입찰참가업체의 공개</li> <li>• 불합리한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당한 수의계약</li> <li>• 특정 업체의 기술 또는 기준 제단</li> <li>• 모호한 양</li> <li>• 명확하지 않은 계약</li> <li>• 불합리한 시간제한</li> <li>• 입찰목록의 공개</li> <li>• 협상금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여부</li> <li>• 차별적인 계약협상</li> <li>• 부정당업체 참가여부</li> <li>• 최저한/적정가 업체와의 계약하지 않은 사례</li> <li>• 공무원의 보고</li> <li>• 불합리한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행 중에 계약자에게 부정당한 처벌</li> <li>• 입찰참가 업체(컨소시엄 업체/하청업체)에게 부정당한 처벌</li> <li>• 품질보증의 생략</li> <li>• 부적절한 계약실행 또는 미 실행 경우에 대한 미 조치</li> <li>• 부정당한 비용/미 시행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li> <li>• 불합리한 서류</li> </ul>



[Session3] "Public Procurement, Vulnerabilities and Best Practices"(IACA)

## 4 [기관방문]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WKStA)

- ◇ 일시 및 장소 : '16. 4. 22.(금) 11:30, WKStA
- ◇ 강사 : Mr. Weratschnig (Federal Prosecutor, WKStA)

### □ 설립 목적

- 경제범죄 및 부패 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검찰조직에 포함('09년)
- 경제관련 부패사건의 전문화된 조사조직의 필요성 대두, 경제범죄, 파산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창설

### □ 기관 연혁

- 2009.1.1. :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발족
- 2011.9.1. : 경제사범 및 경제 범죄까지 관할범위 확장
- 2012.9.1. : 금융범죄·조세·사기 관련 범죄 까지 포함

### □ 조직

- 인력 : 검사장 이하 9개 팀 리더와 31명의 검사 및 9명의 회계사, 2명의 IT전문가로 구성
- 오스트리아 크라쯔(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에 지방검찰청 존재(검사 4명 근무)
- 부패방지경찰국(BAK) 및 국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중

### □ 주요 기능

- 부정부패, 경제범죄,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기소·상소
- UN 반부패기구, EU 반부패 전담기구와의 협력
- 2015년도에 1200건의 부패사건을 신고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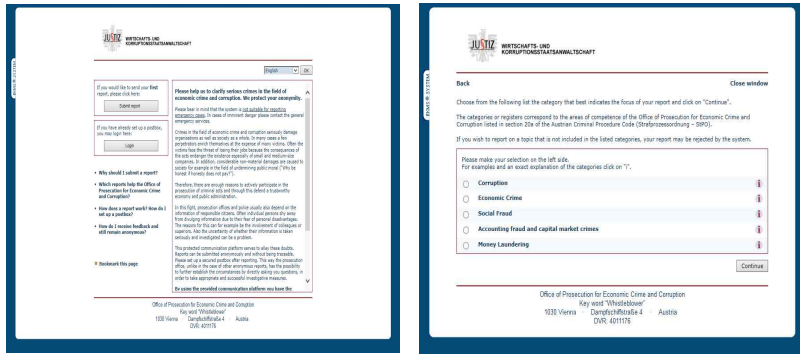
### □ 권한(jurisdiction)

- 관할사건 : 3,000유로 이상의 능동적인 형태의 부패사건, 5백만 유로 이상의 경제범죄
  - ※ 일반 검·경 수사 중 WKStA관할 사건으로 밝혀지는 경우 WKStA로 이관
  - ※ 금액별로 공익 및 정치 관련 500만 유로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찰에서 수사
- 수사 및 기소 권한
  -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및 수사지휘 권한 보유
  - 증권금융감독원, 연방 부패방지국(BAK), 재정부, 감사원, 회계사 등 유관부서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사
  -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실행, 기소, 고발 등
  - 항소는 WKStA 의 고유기능

### □ whistle-blow 핫라인 운영

- 2013년 5월 20일에 설치된 오스트리아의 공익신고 사이트 (<https://www.bkms-system.net/bkwebanon/report/clientInfo?cin=1at21>) 개설
- 내부 신고를 활성화 하고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IP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익명성 보장
- 익명의 내부신고자와 공익신고 사이트에서 각종 자료나 증거 등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등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함

○ 공익신고 시스템 현황



주지 않아도 신고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익명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실명을 받을 일은 없다.

○ 신고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따로 있는지?

→ 처리기한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1~2일 이내에 reply 한다.



[Session4] 오스트리아 경제 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 방문

○ 대한민국 공익신고 게시판과 다른점

- 대한민국의 공익신고 게시판은 익명, 실명 둘 다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두 익명으로만 접수
- 우리나라와는 달리 신고보상금 전혀 없음
  - ※ 국민 전체가 당연히 부패를 보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함

○ 공익신고 게시판 실적

- 2016년 5월 1일까지 221480번 접속하였고, 4007개문서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질의응답)은 2826개가 있음(한달에 약 100건정도 신고 받음)

□ 주요 질의 및 논의사항

-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각급 공공기관에 활성화 되어 유지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까지 지급 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혹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굳이 보상금을

## 5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 ◇ 일시 및 장소 : '16. 4. 25.(월)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강사 : Mr. Georg Krakow

### 1. 부패에 대한 대응(정부조달-민간부문 영역 간)

#### □ 부패사례 모형

- 장기간(15년 이상) 부패 행위가 은폐·누적되어 오던 중 외부에 발견될 시점에 도달한 민간기업의 경우를 가정
  - (A정부) B기업에 예산 지원
  - (B기업) A정부의 철도사업 수행 +무료 철도탑승권 제공
- 불분명한 계약관계 속에서 사적인 영역(무료 철도탑승권)이 누적될수록 부패개연성은 확대됨
- 불분명하거나 상호 타협적인 계약관계를 종식시키고 공식적(투명한) 계약관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나,
  -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사적인 사항을 계속 포함, 만약 무료 철도탑승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시 처방 불가
- 수년 후 조사결과 비리사실이 적발될 경우, 다른 회사와의 계약관계 분쟁여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음
  - 내부 직원간 불신 발생(경영진-직원)에 따른 회사 신뢰도 저하
  - 향후 외부 감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행위를 취할지 전략적 조치를 취할지, 누구의 책임인지 : 내부고발 여부

#### □ 문제점 분석(현황)

- 무료 철도탑승권 받은 (A정부) 공무원은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해당하며, 또한 권한남용과 조세부패 행위에도 해당
- 관련 예산을 철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무료 철도탑승권 용도로 집행한 (B기업) 회계담당자는 공금횡령·유용에 해당
  - B기업은 지속적으로 부패에 대한 소요비용이 증가할 것임
-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A정부)는 (B기업) 이외 다른 업체와도 부당한 계약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 부패에 대한 딜레마

- A정부는 B회사 이외에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A정부는 부패에 대해 관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료 철도 이용권 이용을 위해 C회사에게 기존 계약관계 이행 요구
- A정부 또는 C회사 자체에서 내부고발자 생겼을 경우 문제
- 그러나, 기존 부패가 발생하여 오고 있다는 필연의 사실 존재
- A정부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 부패의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A정부의 대책 유형
  - i)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며 현 체제 지속 유지
  - ii) 직원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체적인 윤리교육 강화
  - iii) 현 문제점에 대한 반성 및 외부 감사기관에 신고

#### □ 실제 처리 결과(바람직한 처리방향)

-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장기적인 고찰 추진
  - 구조적 문제 인식, 조직의 생존방안 강구(비즈니스 지속 필요)
  -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선제적 대응)

- 조직 자생을 위한 자진신고 결의·자정노력 실행
  -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부담으로부터 탈피·충격 완화
  - 결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은 받았으나, 더 이상 피해는 없음
    - ※ 단기적으로는 계약실적은 줄었으나, 회사의 파산과 또 다른 부패 예방

#### □ 시사점(교훈)

- 부패는 사소한 사건과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됨
  - 당초,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복잡한 사회환경에 따라 부패 개연성은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음
-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적 관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 (부패 사전차단) 온정적 관계를 공적관계로 연계시키면 안됨
- 공적자금은 오로지 조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확고한 가치관 필요

## 2. 부패인식에 대한 문제

#### □ 부패 발생 이유

- 내부 감시 소홀에 따른 조직 내 부패 개연성 여지 조성
- 부패 행위자의 지나친 자기 합리화(피해 의식, 개인환경 연계)
- 부패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대함

#### □ 다양한 부패 사례

- 외국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의 배임(회사 자금횡령)
  - 조직 내 신뢰도 저하 및 내부 청렴도 하락
- 통관세 인상 허위보고(루마니아) 및 부패비용 증가로 회사 파산
  - 조직원 전체의 사소한 도덕 불감증이 결국 회사 파산 및 직원 일자리 상실로 연결,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 필요

- 면허 발급을 위한 민원인의 한 차례 속행료 제공(벤츠)으로 또 다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카자흐스탄)
  - 속행료 미납 민원인은 민원처리를 할 수 없어 악순환 발생
- 일시적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판매자금 유용(화장품+사은품)
  - 고객을 위한 인센티브(자기 합리화), 결국 불법적 행위

#### □ 결론(시사점)

- 일시적 부패행위로 인해 단기간(80% 가량) 목표 달성은 가능
  - 뇌물로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뇌물의 구실이 될 뿐 올바른 선택은 아니며, 결국 엄청난 위기에 직면
  - 지속적인 부패행위의 악순환을 끊는다면 부패로 인한 국가손실 보충 가능
- 세계적으로 반부패 관련 법 강화 추세
  - (유럽) 조직의 전체 투자금액 대비 50% 이상 공공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조직으로 간주
  - 민관 구분 없이 투명한 부패 감시망 강화(수평적 관계)



[Session5]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IACA)

## 6 [기관방문] 오스트리아 부패방지국(BAK)

◇ 일시 및 장소 : '16. 4. 25.(월) 13:30, BAK

### □ 조직 개요

- 설립 : 2010년
- 역할 : 오스트리아 반부패 전담 기구
  - 내무부 경찰청 소속 독립기관
  - 지방 조사사항은 위임, 공공부문 400여건/1년 사건 처리
- 중점 : 반부패 경제사범(검찰청)과도 연관되거나 형사 사건 조사
  - 공무원 직권남용 대상, 뇌물사건, 정보보안 침해행위, 자금세탁
  - 50%의 사건은 반부패 경제 검찰과 협업
- 기타 : 부패방지 교육업무, 사건 조사 수행
- 규모 : 125명

### □ 교육 활동

- 부패조사, 정보수집, 부패방지, 예방대책 관련 교육
- 컨설팅 서비스, 기존 사건 조사 분석
- 반부패·청렴 강의, 세미나, 국제전문가 포럼, 리플릿 제작
- 연 2회 특별 교육(반부패의 날(4월) 등)
- 윤리교육 및 상담(부패방지 관계공무원 등 28,000여명)
  - 연 평균 1,734명 / 심화학습 252명 / 연

- 공공서비스, 민간분야, 해외 관계자 1,000여명 교육
- 내부 청렴교육(중사, 순경, 경찰관)
- 청소년 청렴교육(14-18세)
- 기타 국제적, 지역, 시장, 시청, 내부, 감사, 민간인 교육
- 국가적 반부패 전략계획 수립
- 모바일 교육 관련
  - 아바타 활용(초등학생 ~ 정치인)
  - 사건 발생유형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처 및 체험
- 민관 협력체 구성 지원
- 한국의 청렴연수원 집합교육과 유사

### □ 민관 협력

- 세계 각국(다자간) 협력체계 유지
  - UNCAC 이행사항 협조, EU 및 OECD 반부패 거버넌스
- 정보 공유 및 형사사건 등 향후 반부패 연계 사건 협업
  - Paper Company 등 조세회피 목적의 부실회사 조사 공조
- 오스트리아 국제기구 유치 계기(정부실패에 대한 보완 차원)



[Session6] 오스트리아 부패방지국 기관방문

## 7 Compe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

- ◇ 일시 및 장소 : '16. 4. 26.(화)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강사 : 양종삼 (Senior Academic Expert, IACA)

### □ 강의 개요

-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준, 반부패 기본 개념, 사례비교를 통한 청렴 수준의 비교 분석 등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이해 설명

### □ 우리나라의 현 반부패 수준

- 일제 강점기 및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 전개 중
  - 2002년 : 반부패 조직 설립
  - 2003년 : 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도입
  - 2008년 :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 2010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 2015년 : 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 투명성기구의 CPI 평가 등 국제사회 평가는 아직까지 낮음 편임
  - 2015년 CPI : 168개국 중 37위(56점)

### □ 반부패 기본 개념

- 반부패 정책 추진 일반적 절차
  - 제도화 · 교육 ↔ 실행 ↔ 관리 · 점검 ↔ 처벌

### ○ 반부패 정책 추진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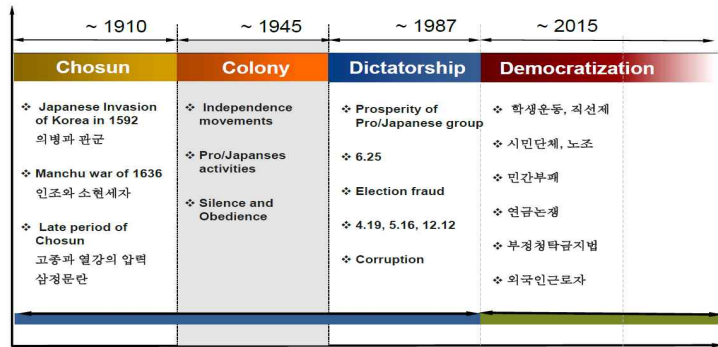
- 연구결과 처벌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년보장, 연금, 보수, 휴가, 자존감 등 보장을 통한 보상강화도 부패 예방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 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부패 감소 가능

### ○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개념
  - 법적인 정의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패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부패로 확장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금품 수수 등 부패개념
  -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및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
  - 뇌물 : 현금, 선물, 향응, 미래 취업 보장 등 포괄적 개념
  - 사기 : 허위로 재정적 이익을 얻는 행위
  - 횡령 : 주어진 책임하의 돈이나 다른 자산을 훔치는 행위
  - 예산 남용 :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적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등
  - 자금세탁 : 불법적으로 획득한 현금이나 자산을 옹기며 출처를 감추는 행위
  - 공모 : 2사람 이상이 횡령등을 공모하거나 공적 조직을 기만하는 행위
  - 권한남용 :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위, 권한,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



## □ 대한민국 공직사회 신뢰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시대별 공통점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

- 관 보다 민간을 중심으로 환란을 극복함 (임진왜란, 독립운동)
- 정부에 대한 신뢰 조성이 힘든 환경 (일제강점기, 개발독재)

## □ 부패 분야에 대한 비교

○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

-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3점으로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4.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 만연
- 지속적인 부패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생성

○ 해외 선진국의 부패 인식 수준

- 우리나라에 비하여 엄격한 수준에서 부패 개념이 형성되어 있으며 공·사 구분이 비교적 명확
- 선물 : 미국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수수 파면
- 공용품 : 커피, 복사, 교통편의 등 자비 부담 문화
- 사적 심부름 : 허용 불가

○ 우리나라의 청렴도 조사 평가 제도

-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측정을 위하여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조사 구분	분야	세부 측정 항목
외부 청렴도	부패지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직간접 부패경험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조직내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
정책고객평가		징계수준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 정책 결정 투명성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발생 정도에 따른 감점

○ 국제 투명성기구의 CPI와 국내 청렴도 조사 비교

- TI의 CPI 인식도 조사와 비교 시 국내 청렴도 측정이 비교적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음

구 분	CPI	국내 청렴도 측정
방 법	설문	설문, 통계
설문 대상	기업인, 언론인	국민, 언론인, 공직자, 외국인
측정 크기	100~200명	250,000명
질문 유형	인식	인식, 경험, 행정 절차
감정 요인	기업인의 인식도	연간 부패 경험

○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조사 결과

- 공무원(3.3)에 비하여 민간기업(3.2)의 부패인식이 낮게 측정됨, 94%의 국민이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 미국에서는 대기업 분식회계 등에 대하여 엄정 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대기업의 증여세 탈세 등을 통한 3세, 4세 경영까지 승계, 경제 수준의 편차 심화, 선진국 대비 복지제도의 낙후 등 사회 전반의 형평성 차이가 부패인식에 악영향

□ 사례별 부패 원인 등의 비교

○ 그리스 지급불능 위기의 원인 검토

- 그리스 부채 증가 원인을 피상적으로 과도하나 복지, 일반 국민의 나태함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 공공의료, 세무서, 건설 면허 등 공공분야 뿐 아니라 사설병원 운전면허 등 민간 영역에서도 추가 부담금 등이 만연하는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행정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 검토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은 OECD 국가중 22위로 GDP의 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스 24위 27.5%)
- ※ 지하경제 : 장물, 마약거래, 매춘, 밀수, 뇌물 등 불법적 활동과 상속세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등 포함

○ 조달, 계약분야에서의 부패 개념 변화

- 부패 방식의 고도화
  - 과거 현금, 상품권 수수에서 재취업, 카드지급, 스폰, 해외출장, 평가위원 선정 등으로 은밀화

- 부패 집단의 연대화

- 입법부, 언론사, 기업, 행정부, 사법부, 여론 선도계층 등 사회지도층의 학연, 지연, 결혼 등의 연대 추세
- 부패 처벌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일반국민의 사회적 신뢰 저하는 물론 출산률, 공무원시험 열풍, 여론 조작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부패 감시 및 개선 필요



[Session7] "Compe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IACA)

## 8 (기관방문) 유엔 마약범죄국(UNODC)

◇ 일시 및 장소 : '16. 4. 26.(화) 13:00, UNODC

### □ 개 요

-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위치한 빈의 UN본부를 방문하여 UNCAC(유엔 반부패 협약) 관련 사항 이해

#### < 기관소개 >

- 설립목적 : 전 세계적인 부패, 불법마약유통, 범죄예방 및 범죄사법, 국제테러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9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 조 직 : 1개 본부(집행국장실 외 4개과), 2개 연락사무소, 21개 지역사무소  
\* 4개과 : 기획집행과, 조약과, 정책분석협력과, 운영예산과
- 인 력 : 약 550명
- 주요기능
  - 부정부패, 조직범위, 인신매매, 테러방지 활동
  - 약물규제 및 마약범죄 예방
- 관련협약 : 국제조직범죄협약('00년), UN부패방지협약('03년)

### □ UN 반부패 협약 개요

- 부패는 세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는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세계화 되면서 국가 간 자금 세탁 등으로 국경 없이 확산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대두
- 국제 협력을 통해 부패위험성을 인식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 기준 통일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2003년 반부패 협약 발표  
\* 2003.12.9. UNCAC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반부패의 날로 지정
- 현재 178개국이 반부패협약에 참여하는 등 국제 사회가 부패 척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UNODC는 반부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 및 계획 검토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에 조인하였고, 2008년 2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식 당사국으로 참여 중

### □ UNCAC 세부 내용

- 주요 구성

- 부패방지, 부패의 범죄규정 및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등 주요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제2장 예방조치 (제5조~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li> <li>○ 부패방지기구 설립</li> <li>○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li> <li>○ 공무원행동강령</li> <li>○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li> <li>○ 공공보고</li> <li>○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li> <li>○ 민간부문의 부패방지</li> <li>○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li> </ul>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제15조~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li> <li>○ 외국공무원 및 국제공공기구 직원의 뇌물수수</li> <li>○ 공무원의 횡령, 착복 및 기타 유용</li> <li>○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li> <li>○ 직권남용, 부정축재</li> <li>○ 민간부문의 부패, 민간부문 횡령</li> <li>○ 범죄수익의 세탁, 은닉, 사법방해</li> <li>○ 법인의 책임</li> <li>○ 공범 및 미수</li> <li>○ 범죄구성요소, 시효, 기소·선고·처벌, 동결·몰수·압류</li> <li>○ 증인 및 피해자의 보호, 신고자 보호</li> <li>○ 부패행위의 결과, 손해보상</li> <li>○ 특별 당국, 법집행당국과의 협력, 당국간의 협력, 사적 부문과 국가당국 간의 협조</li> <li>○ 금융비밀, 범죄기록, 관할권</li> </ul>

구 분	주 요 내 용
제4장 국제협력 (제43조~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li> <li>○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li> <li>○ 사법공조, 이관, 법집행 협력, 합동조사, 특별수사기법</li> </ul>
제5장 자산회복 (제51조~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규정,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li> <li>○ 재산의 직접 회복</li> <li>○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체계, 물수를 위한 국제협력, 특별협력</li> <li>○ 자산의 처분과 반환, 금융정보기관</li> <li>○ 양자·다자 협정 및 약정</li> </ul>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제60조~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및 기술지원</li> <li>○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과 분석, 기타조치</li> </ul>

### < 세부 내용 >

- 부패방지기구 설립을 통해 효과적 반부패 활동 추진(제6, 36조)
  - 기구의 독립적 위상, 적절한 자원,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며, 강력한 규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 필요
- 공공부문의 반부패 활동(제7조)
  -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 공무원 채용, 퇴직체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순환보직,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공적 지위, 정당으로부터 독립적 지위 등 확보
- 공무원행동강령 마련(제8조)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 제공 등 명확한 행동지침 제시 필요
  - 구성원에게 강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으로 신뢰 구축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준수강령과 청렴성 기준은 조직 여건, 청렴성 등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병행·적용이 효과적

- **(준수강령)**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준수 기준을 제시, 심각한 부패상황에 직면한 경우 효과적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청렴성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원칙으로 구성, 추상적 개념으로 기준에서 벗어나도 처벌 어려움, 청렴성에 기반한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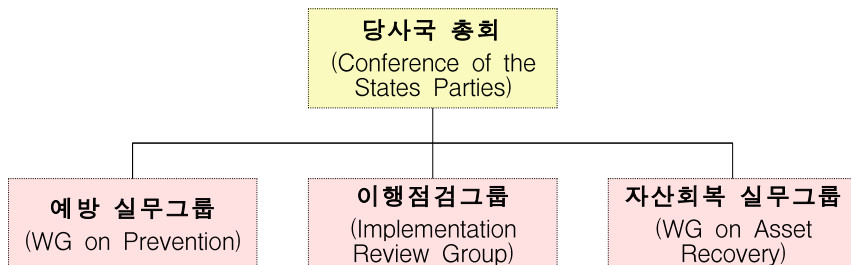
### ○ 공공조달 분야(제9조)

- 공공조달 분야는 예산규모가 커서 부패 개연성이 크며, 투명성, 객관성, 경쟁이 핵심 요소임
- 정부에 의한 조달기준의 객관적 기준 공표, 객관적 의사결정 기준, 실효성 있는 내부심사 제도, 공무원의 책임감 등이 투명성 향상의 개선 등이 중요 항목임
- **(입찰 준비단계)** 구체적 계약적 요구사항 파악, 특정업체의 기술조건 배제, 입찰 기간 검토, 최소요구조건 등
- **(입찰단계)** 공고 및 입찰자 평가 단계로 다양한 사례의 부패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인적·제도적으로 최고 수준의 투명성 필요
- **(입찰 후 단계)** 계약 이행과정의 적정성이 계약 목적물의 최종 품질을 결정. 계약변경, 점검·평가 시행 시 금품 수수 등 부패 발생이 가능하므로 제도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공공조달 부문의 청렴성 향상 방안
  - 인적·제도적 차원의 지속적 개선 등을 부패 유발요인 제거
  -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간의 신뢰를 통한 발전적 관계 구축
  - 내부 고발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전자조달 시스템 등 담당자간 접촉 횟수 차단 등으로 부패요인 제거, 단 정보 보안 등의 기술적 문제 해결 필요
- 국가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정보 접근성 강화(제10조)
  - 국민들에게 정보공개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절차의 공개
  - 행정절차의 단순화 등
- 민간부문에서의 방지책(제12조)
  - 회계, 감사시스템 강화 등 견제 및 감시 체계 실효성 확보
- 자금세탁방지(제14조)
  -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 UNCAC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검토체계

- 검토 체계 개요
  - 협약 당사국 간 지속적 총회의 개최(2006~2015)를 통하여 반부패 정책관련 정보교환, 추진방안 마련, 실행력 검토 등의 활동을 전개
  - UN부패방지협약(UNCAC) 관련 조약기구 구조



- UNCAC 이행 검토체계
  - 협약 준수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준수방안 및 공개여부 결정
- 점검 단계(Phases of the review)
  - 자가진단(Self-assessment) : 포괄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서류검토(Desk review) : 해당 점검국
  - 점검대상 국가와 점검국 간의 대화(전화, 메일 등)
  - 방문 심사
  - 결과보고서 산출
    - \* 요약보고서는 공개, 전체보고서는 점검대상국가에서 공개여부 선택



[Session8] UNODC(유엔 마약범죄국) 기관 방문

## 9 Organisational Integrity

- ◇ 일시 및 장소 : '16. 4. 27.(화)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강사 : Prof. Jeroen Maesschalck

### □ 윤리·청렴에 관한 몇 가지 정의

- **(윤리)** 일상적인 행동을 이끌어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치와 규범
- **(청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
  - \* 부정·부패 회피 이상의 것 및 윤리적 딜레마에 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
-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가치가 상충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각각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대안들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 **(윤리경영)**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윤리적 행동을 보장하는 수단

### □ 윤리적 딜레마 사례

#### (사례1)

· 당신이 기금 접수 직원이고 기금의 지원서 마감 기한이 오늘 오전 12시 까지였다. 그런데 오후 3시에 한 사람이 보조금 신청을 위해 들어왔고, 사정을 들어보니 아들이 큰 사고가 있어 불가피 하게 늦었다고 하였다. 보조금의 접수는 마감되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신이 이 사람의 지원서를 받아 준다고해서 당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례풀이)

늦은 사람의 사정을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하여 추가 접수를 진행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기한을 못 맞추기에 포기했을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으로 적용된다.

이렇듯 우리는 무수한 상황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피해를 받는 잠재적 인물이 존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기준을 보완하거나, 해당 접수 건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 2)

· 당신이 인사담당자이고 회사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인원 감축을 진행할 예정으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친한 동료가 해고 대상자 명단에 있고, 그 동료가 당신에게 자신이 해고 대상인지를 물어왔다. 자신이 다른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있으나 자신이 해고자 명단이 아니면 자신은 회사에 남고 싶으니 당신에게 확실히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동료에게 비밀리에 해고대상임을 알려주고 스카웃 제의를 받으라고 조언해주고 싶지만 업무상으로는 내부비밀이기 때문에 발설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례풀이)

사례 1과 마찬가지로 부패와 연관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지인에 대한 사정을 본다면 알려주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상황의 해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스카웃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윤리 딜레마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다가오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제도적인 보완, 내부 검토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 □ 윤리경영에 관한 두 가지 접근법

#### ○ 규칙 기반(Rules-based) 접근법과 가치 기반(Value-based) 접근법

	규칙 기반(Rules-based) 접근법	가치 기반(Value-based) 접근법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윤리적 행동 회피</li> <li>-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li> <li>- 구성원에 대한 통제 강조</li> <li>- 전형적 수단 : 법률, 엄격한 행동 강령, 엄격한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행동 촉진</li> <li>-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li> <li>- 구성원 스스로에 의한 통제 강조</li> <li>- 전형적 수단 : 워크숍·교육, 의욕적인 행동강령, 개별 지도</li> </ul>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내역 방대화로 효율성 ↓</li> <li>- 규정간 해석의 모순 발생</li> <li>- 개인의 창의성 저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해석으로 악용 가능성 ↑</li> <li>- 상황별 기준 차이로 혼란 야기</li> <li>- 내재화 시간이 오래 걸림</li> </ul>

○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적절히 조화시켜 적용할 필요

\* 규칙 기반 접근법은 비윤리적 행위 예방에 효과적이며 가치 기반 접근법은 구성원의 윤리적 딜레마 대처 지원에 효과적. 그 반대도 성립

□ 청렴경영 체계

1. 수단(Instruments)

< 4개 기능, 2개 층(layer), 2개 접근법 >			
4개의 기능	- 청렴성 결정 및 정의(예: 위험 분석, 행동강령, 선물·향응정책) - 청렴 기준 전파(예 : 교육, 지도, 소통, 윤리적 리더십) - 청렴성 모니터링(예 : 내부신고자 정책, 일상점검, 설문조사를 통한 측정) - 청렴 기준 집행(예 : 비공식적 제재, 징계절차)		
2개의 층	- 핵심 수단 - 보완 수단		
2개의 접근법	- 규칙 기반 - 가치 기반		
< 3개의 축과 2개의 층(layer) >			
구분	수단	절차	구조
핵심 수단	- 강령, 규칙, 지침, 청렴 훈련 및 권고	- 지속적인 청렴 개발 과정, 일회성 계획들	- 청렴 담당자, 경영진
보완 수단	- 인력 선발 및 승진 기준으로서의 청렴, 조달에 있어 청렴 등	- 인력 관리, 조달·계약 관리상 절차 등	- 인력 관리, 계약 관리, 재무 관리 담당자 등

가. 청렴성 결정 및 정의

○ 규정화

- (위험분석) 규칙 기반의 적극적·전향적 접근
- (딜레마 분석) 가치 기반 접근으로 중요한 보완요소
-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자문) 중요하긴 하나, 최종결정은 경영진이 해야 함

○ 강령 제정

- 강령의 유형 : 규칙 기반 행동강령, 가치 기반 윤리강령, 두 강령의 조합
- 강령 제정 이유 : 명확성, 책임성 증대, 의무감과 성실성 촉진
- 강령 제정을 위한 지침
  -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기술
  -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하면 단순하게 기술
  - 가능하면 거의 흠결이 없도록 일반화·보편화할 것
  - 논리적 구조로 만들고, 개념 사용에 있어 일관성을 가질 것
  - 가능하면 규정 내에서 앞뒤 참조를 많이 할 것
  - 강령 내의 가치들 간의 순서를 고려할 것
  - 가치로서 '법률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 것

○ 정기적 토론과 동료 간 재검토 등을 통한 명문화되지 않은 기준 확립

○ 청렴 정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

- 직무 분리 및 순환
- 이해 상충 정책 :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OECD 체크리스트와 같은 수단 제공
- 선물과 향응 정책
  - 원칙적으로 선물 수수를 금지하되, 선물수수 절대 금지가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정책 필요
  - 단, 리베이트는 금지하고 모든 선물은 보고되어 관리되어야 함
- 공직 퇴직 후 재취업 정책

○ 청렴 정의 시 구조적 보완수단

- 인력 관리(채용, 근평 및 승진 기준으로서 청렴 등), 조달 정책, 재무 관리, 정보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품질 관리

## 나. 청렴으로의 유도

### ○ 조직의 일상적 담화에 있어서 청렴 통합

- 외부 소통(잡지, 웹사이트, 표적 메일 등)을 통해 청렴정책 공표
- 공식적 내부 소통(사보, 인트라넷 등) 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정기 토론
- 구성원 미팅, 감독관-고용인 간 개별 미팅에서 청렴 이슈 토론 제도화
- 열린 소통문화 조성

### ○ 청렴 지도 및 권고

- 개별 지도(훌륭한 신입직원 모집과 적절한 지도자 훈련이 본질적)
- 반(半) 독립체 설치(책임감 제거 위험 및 최후 수단으로서 유일한 권고 보장)

### ○ HR 과정에서의 공정성 평가

- 공정성은 청렴을 설명하는 결정적 변수

## 다. 청렴 감시

### ○ 수동적 감시(내부신고자 정책)

- 스캔들이 되기 전에 문제 해결 목적으로 시행
- 행위의 보고 채널과 보복에 대한 보호 필요
- 기술적으로 숨겨진 위험요소는 잘 다듬어져야 함
- 잘못된 고발 사례에 대한 대응장치를 포함해야 함
- 윤리경영의 핵심요소가 아니라 필수 안전망임

### ○ 적극적·능동적 감시

- 개별적인 청렴 위반에 대한 적극적 조사
  - 관리자에 의한 일상적 감시·감독
  - 공식적 통제수단이며, 조기 경보 시스템임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접적·사회적 통제
- 청렴 위반 및 청렴 딜레마에 대한 조직 차원의 면밀한 계획
  - 불만요인에 대한 체계적 등록
  - 설문을 통한 청렴 위반과 딜레마 측정
  - 구성원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와 이슈에 대한 비공식적 탐지

## 라. 청렴 강제

- 사회적 통제나 일상적 감독의 결과로서의 비공식적 제재
- 공정하고 적정한 조사 및 제재 절차
- 청렴 위반에 대한 내·외부 소통에 대한 적절한 절차

## 2. 개발 과정(Development Process)

-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행 부족 극복, 초기 열정 감퇴 후 잔존, 최신 체계 유지 보증, 조직화 보증 측면에서 중요
- PDCA(계획-실행-점검-조정)에 따르는 것
- 조직화를 위해 청렴경영 체계 차원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 과정이 중요
- 청렴경영 체계 소개와 같은 일회성 계획도 필요



### 3. 기관 내 구조(Structures)

구분		청렴성 결정 및 정의	청렴으로의 유도	청렴 감시	청렴 강제
핵심 담당자	경영진	+++	+++	+++	+++
보완 담당자	청렴 담당자 계약·재무관리 및 인사관리 담당자 등	++	++	++	++

#### 가. 경영진

##### ○ 청렴경영에 관한 적극적 리더십

- 청렴경영과 의사소통 시 청렴에 관심을 갖도록 충분한 수단을 보증하는 등 청렴경영에 대한 명시적 지원

##### ○ 도덕적인 관리자

-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고 구성원이 실수를 공개할 수 있는 열린 문화를 만드는 등 구성원들 사이에 청렴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상 노력

##### ○ 도덕적인 사람

- 정직, 신뢰, 모범적 행동 등 청렴에 관한 관리자의 개인적 특성

#### 나. 청렴 담당자

- 전문 지식 축적, 조직화시키는 역할에 있어 경영진의 지원, 최초 정책 실시 후 연속성, 직무 표시, 가시성 등 제도화가 필수적
- 개인, 위원회, 실무단 등 많은 형태로 진행 가능하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청렴경영에 대한 공유 유지

#### □ 결론 및 시사점

- 윤리경영은 내실없는 수사학을 넘어서야 하고, 윤리경영 수단은 업무 영역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져야 함
- 윤리경영은 규칙 기반 접근법을 넘어서야 하고, 청렴 위반 예방만이 아닌 **공직자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처도 지원**해야 함



[Session9] "Organizational Integrity" (IACA)

### III. 오스트리아 정책의 국내 적용 방안

#### 1 공공조달 단계에서의 개선대책 마련

##### 1. 추진배경 및 문제점

- 2015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건설사업에 11조 8천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 대지조성 4.5조원, 주택건설 7.3조원(주택 5만호 착공, 4만 8천호 준공)
- 하지만 공정한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반부패 3법 시행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주요 부정부패 사례

- 설계변경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로 금품수수 (파면)
- 하도급업체 참여 및 업체변경 승인을 대가로 금품수수 (파면)
- 특정 지급자재를 선정하여 이를 납품하는 대가로 뇌물수수 (파면)
- 공사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를 방문한 고객의 증액보증금을 개인이 수령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 (파면)
- 직무관련자인 하수급인과 골프여행을 다녀오고, 공사비를 이종으로 지급하는 등 감독자로서의 업무 소홀 (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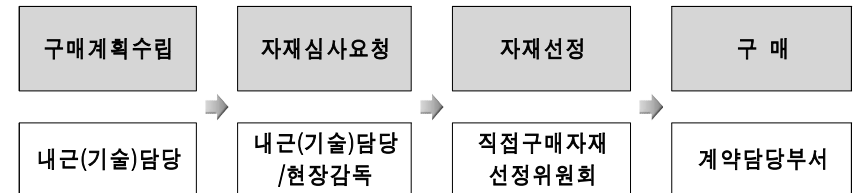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금번 국민권익위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에서 습득한 청렴 선진국의 우수시책 및 타 기관의 모범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관에 부합하는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기관 적용방안

###### □ 공공조달 단계에서의 개선대책 마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우리법령의 내용과 서구 선진사례를 비교해 볼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 과정에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시사점이 발견됨
- 자재 및 공법선정 시 심사위원회에 타 직종 직원의 참여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단계에서 제조업체 익명처리 하는 등 특정자재·공법 선정절차 개선
- 정부권장자재 등 수의계약자재 구매결정 절차의 투명화 추진
  - 설계적합성, 정부권장인증 등을 고려하여 자재심사 요청
  - 직접구매자재 선정위원회 2/3이상 찬성 시 구매결정

###### ※ 개선된 수의계약자재 구매절차



######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

-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방문국인 오스트리아 경제·부패전담 검찰청(WKStA)의 Whistle blower website(내부고발시스템)에 214,212회의 접속과 3,904건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공사의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을 비롯한 부조리신고, 감사 핫라인, 공사와 거래신고, 검직신고, 금품반환신고, 외부강의 신고, 청탁 신고 등 각종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임
- 이에 각종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외부고객 및 내부직원 모두가 손쉽게 인지·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익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LED 게시판 등에 상시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 통합신고방 운영 화면



3. 기대효과

- 국내최대 건설공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가 공공조달에 있어 선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립하고
-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국민공기업으로 도약

2 익명성 보장 「내·외부 신고시스템」 발전 방안

□ 추진 배경

- 공단은 2011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신고시스템 운영 중
-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검찰청(WKStA)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패신고 시스템(Whistle-blower website)을 운영중이나 신고 활성화 부분에 대한 방안 검토

⇒ 공단에서도 유사시스템을 운영중이나 관리체계, 신고접수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시스템 운영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적용 방안 마련

<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검찰청 >

- 익명성 보장을 위해 IP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인식 확산(독일 서버 사용 등)
- 익명신고(인터넷) 채널을 단일화하여 신고의 효율성 도모
  - 6개 분야(부패, 경제범죄, 사회보장, 금융, 회계·주식, 자금세탁 분야 등)를 1채널로 신고 접수
  - 신고현황 : 총 3,000여건(부패, 경제, 복지, 세제 등 분야)

\* 익명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는 운영 안함

## □ 그간의 추진경과

- (2011. 11. 28. ~ 2012. 11. 27.)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 도입
  -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시스템 위탁·운영 계약
    - \* 제보자의 신분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인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익명신고시스템
- (2013. 1. 1. ~ 2013. 12. 31) 핫라인(Hot-Line) 시스템 도입
- (2014. 1. 1. ~ 현재까지) '레드휘슬(redwhistle) 헬프라인' 도입

<신고 접수·처리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위탁운영업체	KBEI	(주)에드넥스	(주)레드휘슬	
접수·처리 현황	4건	13건	15건	17건

## □ 문제점

- 기존 설명시스템에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처리 현황이 저조하여 신고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등 8종의 신고채널이 혼재되어 신고의 불편함 초래
- 익명신고시스템 등 부패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직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필요**

\* 2015년 헬프라인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헬프라인 접속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다수(60%)**

\*\* 2015년 신고자 보호 설문조사 자유의견 중 신분보호 등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직원 신뢰 구축 의견 제시(총 135명/204명)

## □ 적용방안

- 스마트폰 전용 신고앱(App) “국민연금공단 헬프라인” 구축
  - 부패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 폰 앱(App)을 활용\*하여 상시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 ※ 주요특징

- 어느 장소에서건 즉시 제보 가능, 개인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불필요하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 처리결과 제공으로 신고자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홍보 스티커 신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부패신고 관련 홍보 스티커 신규 제작시 외부위탁·IP 추적 불가능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구체적 기능\* 홍보

\* 회원가입절차 없음, IP 추적불가 익명서버 시스템, 제보내용 암호화, 로그파일 실시간 삭제

### ○ 접속경로 일원화 등 신고 편의성 관점으로 홈페이지 개편

#### <개편 중점방향>

- ❖ 신고메뉴(클린센터)의 신고채널 접속방식을 「개별\* → 통합·일원화」로 개선
  - \* (현행) 메뉴에 나열된 신고채널별로 선택·접속 → 고객 직관에 의존
- ❖ SQ(Screening Question)를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신고채널을 제시(맞춤형)

- **(통합·일원화)** 신고메뉴에 나열된 각 채널을 신고기능과 공개 기능으로 분류·통합하고, “**신고하기**” 포털메뉴 신설

현행	8개 채널 나열	⇒	개편	“신고하기”, “청렴소식/부패현황 공개” 2개 메뉴로 통합
----	----------	---	----	----------------------------------

## □ 부패행위 등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 헬프라인 사용방법\* 신고대상\*\*, 신고내용 처리절차 등 지사 안내
  - \* PC, 스마트폰 및 QR코드 이용
  -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공직생애 주기별, 사이버 청렴 교육내용에 신고자 보호 등 내용 강화
  - 신규직원, 승진자 교육 등 청렴교육과정에 교육 시간 부여

## □ 기대효과

- 신고채널을 단일화 하여 내·외부 신고 활성화 유도 및 신고문화 정착에 기여
  -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효과
  - 내부 소통창구 마련으로 조직 내 잠재적 불만요소 파악 해소

## 3 사업계약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강화

### □ 추진 배경

- '14. 8월 자체감사를 통하여 **용역사업 수행 중 내부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업무상 배임, 뇌물 수수 등 부패사건 발생**
  - ※ 관련자 1명은 파면, 이해관계 직원 7명은 정직·견책, 허위로 지급된 용역비 152백만 원은 전액 환수

전 세계적으로 공공계약의 20 ~ 25%가 부패로 상실

- 오스트리아의 경우 공공조달 분야가 가장 취약
  - ※ 500억 유로 중 50억 유로 부패비용으로 상실
- 사업자와 발주기관 담당자 간의 부패행위로 서비스 질, 사회신뢰가 저하되며, 암거래 활성화 등 조용한 인플레이션 발생

- ➔ 사업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까지 업무절차 표준화와 내외부 수시교육, 직무관련 업체 대상 외부강의 전면 금지 등 **사업계약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 □ 내용

- **(사업절차 표준화)** 업체 선정부터 사업종료 등 **전 사업과정\***에 대한 업무절차 및 서식 표준가이드 시행
  - \* 사업계획 → 발주 → 계약체결 → 사업수행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사업완료
-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우리원과 계약관계를 맺은 업체 외 관심 있는 모든 사업자들 대상으로 용역사업의 업무절차 등 설명회 개최
- **(내외부 대상 표준활용 교육)**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사업절차 표준화 관련 교육 실시

- **(외부활동 강화)** 우리원과 직무관련업체 대상의 외부강의 등은 전면 금지하고, 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 ①대가를 받았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②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③대가금액이 신고 후 변동되었는데 수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대효과** \* 건전한 공공조달의 중요원칙(투명성, 효율성, 경쟁 강화)

- **[투명성]** 사업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완료까지 업무절차 표준화 정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 기반 마련
- **[효율성]** 사업수행 시 동일한 기준·절차로 우리원과 업체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업무수행의 일관성 제고 및 사업 품질 향상 기대
- **[건전한 경쟁]** 계약관계를 맺은 업체 대상 외부활동의 전면 금지로 부적절한 청탁과 로비를 사전 차단하여 투명한 경쟁 유도

**4 부패 예방을 위한 윤리규범 마련 및 모니터링 고도화**

□ **추진 배경**

- 부패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잘 준수되고는 있으나,
-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 분야가 확장되거나 세분화되어 부패발생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기술지원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 보다 고도화된 예방조치와 모니터링 방법 마련 필요

□ **내용**

-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반영
  - 주요 참고 반영 사항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 마련
    - 공공조달 분야 부패개연성 차단을 위한 투명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입찰단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회계, 감사시스템 강화 등 견제 및 감시 체계 실효성 확보
    -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도적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부패 유발요인 제거
- 부패발생 사전예방적 윤리규범 마련 및 모니터링 강화

구 분	주 요 내 용
임직원 행동강령	· 연금급여 지급 등 임직원에 대한 부패개연성에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마련 · 사후징벌적 기준 외 사전예방적 규범 마련

구 분	주 요 내 용
공익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낮은 이용도 해소를 위한 기준 개선</li> <li>• 익명신고시스템 홍보 활성화와 익명신고 건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보완</li> </ul>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담당직원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 개인거래 내역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마련</li> <li>• 자산운영 업무관련 직원에 대한 녹취시스템 운영 내실화</li> <li>• 직접채권 운용담당자로 한정된 메신저 모니터링 대상 확대</li> </ul>
내부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등 부패영향평가 강화</li> <li>• e-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li> <li>• 윤리규범 주관부서의 임직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감사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접수 처리 등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li> </ul>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주관 청렴교육 실시</li> <li>• 청렴연극 등 교육 도구 다양화를 통한 임직원 참여율 제고</li> </ul>

### □ 기대효과

- 내부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윤리규범 마련으로 부패근절 및 청렴 공단 도약
- 사후 징벌적 기준이 아닌 부패발생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 규범 운영으로 청렴문화 조성
-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임직원 청렴도 수준 향상

## 5 청렴서약제 도입

###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설공사(물품구매, 용역) 등을 시행하면서 -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 (관계공무원) 청렴서약 작성 의무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탄생한 반부패 관련 글로벌 교육기관인 IACA(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에서도
  - UN마약범죄국(UNODC), EU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등의 주도 아래, 선진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을 만들고자 고군분투 중에 있으며, **공공분야 청렴도 향상 주문**
- ⇒ IACA의 반부패 기본방향인 ‘공공분야 청렴도 향상’에 부응, 민간 분야보다 더 높은 청렴의식 확산을 목표로 현행 계약관련 규정을 보완 발전시켜 청렴도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자 함

#### < 반부패 관련 국제정세 >

- 개별 국제기구 또는 국가 대 국가의 양자 관계 위주로 진행되던 반부패 협력 사업이 국제기구 간 협력과 다자간의 양상으로 종합화
- 반부패 개념의 확장 및 예방 정책 보급의 중요성 대두
- 반부패 활동의 표준화 등 시스템적 접근 방식이 시도

## □ 청렴서약제 제도의 기능 및 역할

-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공사·용역」 수행,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보관을 의무화
- 청렴서약 이행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

“청렴서약”의 구체적 실효성을 갖게 하고, 자발적 청렴의무 부여를 위한 道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 규칙제정

## □ 규정에 담을 주요 내용

### ① 대상사업 등의 범위

- “물품계약”은 건당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 “공사계약”은 건당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 “용역계약”은 건당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학술용역 제외)

### ② 청렴 서약서 작성 의무 적용범위

- 道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관계 공무원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대상 공무원은 제외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적용

### ③ 이행상황 확인 및 조치

- 감사부서에서 연 2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
- “청렴서약” 불이행시 문책 가중 및 관련 정보 공개

### ④ 청렴서약서 내용(안)

본인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정방침에 근거한 반부패·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업 관련 특정정보를 관련 업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은 물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체 등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 임을 서약합니다.

## □ 추진방안(불이행에 대한 조치)

-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이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및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

##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부패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 분야의 관계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민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시점에서 한 차원 높은 공직윤리 구현 가능



## 6 계약상대자와의 신뢰를 통한 발전적 관계 구축

### □ 추진 배경

- 공단은 철도건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인적 구성원의 청렴성 함양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 \* '14~'15년 권익위 제도개선 컨설팅, '16년 정부 부패방지 백신 프로젝트 등
- 연간 약 8조원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많은 참여업체 간의 과다한 경쟁 등이 부패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 UNODC의 UNCAC 강의에서 공공조달 부문의 청렴성 향상 방안의 하나로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간의 신뢰를 통한 발전적 관계 구축 제시 사례를 적용 검토 추진
  - 공단의 청렴 정책 방향을 공단 내부 중심에서 협력사 까지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청렴성 함양을 통해 공단의 청렴수준도 함께 향상 시키는 방안 검토

### □ 적용 방안

- 공공부문의 발주자인 공단과 민간 협력업체 간의 소통채널 구축
  - 과거 이미지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협력사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공단의 조달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 일괄입찰공사 심의 시 협력사에서 개인 루트를 통한 입찰정보를 습득하는 관행 근절을 위하여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 표준 규격을 확대하고 사전 공개를 통하여 제정

- 발주 규격에 특허 기술, 특정 공법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 확립을 위하여 표준 규격 확대
- 기존에 제정된 표준규격은 주기적 정비를 통하여 보완하고, 미규격화된 품목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 규격화 추진

### ○ 타 기관과 점검 시 공단 윤리기준 제공으로 청렴성 함양

- 개통 합동 점검 등 타기관 철도건설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타기관 관례상 협력사로부터 식사, 차량편의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 전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단의 윤리기준 사전 고지

### □ 기대 효과

- 공단과 업무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공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상호 신뢰형성으로 부패 위험요인 제거 및 사회전반으로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 7 청렴경영체계 지속적 개발

### □ 추진 배경

- 부패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부패행위는 존재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활동보다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부패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저하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청렴활동 및 청렴 홍보를 강화하여 청렴한 이미지 확산 필요

### □ 내용

#### < 공공조달의 취약점 및 모범사례 >

- 공공조달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원칙(투명성, 경쟁, 객관성)
  - 투명성 확보
    - 모든 대상자에게 조달기회를 제공하고 공고를 통해 준수사항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진행결과를 공개
    - 진행 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부정한 자에 대한 처벌
    - 조달 절차를 이해관계자가 모니터 할 수 있게 하라
    -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불이행이 적발된다는 것을 보장하라
    - 속이거나, 차별적인 조달 결정이 어렵게 하라

#### 적용방안

- 하도급대금 직불제 프로세스 고도화
  - 기존 수기처리 하던 직불제를 전산화하여 협력사 편의 증진
  - 대금지급 여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투명성 강화
- 계약진행상황 알리미 서비스 및 단계별 모니터링
  - 계약체결 등 계약진행상황을 SMS 문자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
- 지체상금 조회 서비스
  - 지체상금 납부 시 계약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던 지체상금 조회

프로세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토록 개선

#### < 사기방지의 방법과 개념 >

- 사기(Fraud) 위험관리 방법
  - 사기 위험 평가(Fraud Risk Assessment)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사기 방지 조치(Prevention)
    - 예방을 위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마련
    - 위험성 직무는 순환보직, 직무를 분리 및 견제 역할 부여
    - 위험신호 관리, 모니터링, 상급자의 확인
    - 행동강령 및 그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 CEO의 사기 예방 의지, 조사·감사의 인적·물적 지원
    -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 적용방안

- 취약분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채널 확대
  - 규격심사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시행 (4~10월)
  - 권역별 업체와의 **간담회 시행**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해결
- 청탁금지법 시행령 등을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전교육 시행 등

#### < 반부패 비교연구 >

- 공공기관의 적절한 개선(보상 vs. 처벌)
  - 지금까지의 대책은 주로 제재와 처벌에 집중
  - **제재뿐만 아니라 보상도 강화** : 정년, 연금, 보수, 휴가, 자존감 등 보장
  -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부패는 감소

#### 적용방안

-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제도 활성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규 정비 (포상금 증액 등)
- 청렴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청렴 마일리지 제도**” 고도화
  - 각 소속의 청렴활동에 마일리지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리

- 우수 소속 상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활성화

**< 조직차원의 청렴성 >**

□ 청렴경영 체계

○ 청렴으로의 유도

- 조직의 일상적 담화에 있어서 청렴 통합
  - 외부 소통(잡지, 웹사이트, 표적 메일 등)을 통해 청렴정책 공표
  - 공식적 내부 소통(사보, 인트라넷 등) 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정기 토론
  - 구성원 미팅, 감독관-고용인 간 개별 미팅에서 청렴 이슈 토론 제도화
  - 열린 소통문화 조성
- 청렴 지도 및 권고
  - 개별 지도(훌륭한 신입직원 모집과 적절한 지도자 훈련이 본질적)
  - 반(半) 독립체 설치(책임감 제거 위험 및 최후 수단으로서 유일한 권고 보장)

□ 개발 과정(Development Process)

○ 경영진

- 청렴경영에 관한 적극적 리더십 : 청렴경영과 의사소통 시 청렴에 관심을 갖도록 충분한 수단을 보증하는 등 청렴경영에 대한 명시적 지원

□ 결론 및 시사점

- 윤리경영은 내실없는 수사학을 넘어서야 하고, 윤리경영 수단은 업무 영역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져야 함
- 윤리경영은 규칙 기반 접근법을 넘어서야 하고, 청렴 위반 예방만이 아닌 공직자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처도 지원해야 함

**적용방안**

○ 청렴경영에 관한 **적극적 리더십**

- 임원 신규 임명시 '**직무청렴계약**' 체결로 청렴의무 준수 강화
- 상임감사위원의 **청렴특강**으로 청렴 리더십 강화
  - 전소속 대상 '인문학과 청렴의 만남'을 주제로 청렴특강 시행
  - 청렴연수원 인조이(In-joy) 교육시 상임감사위원 특강 편성
- **경영진과 함께하는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반부패·청렴 시책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청렴으로의 유도·통합을 위해 **IT를 활용**한 내·외부 소통

- 친근한 매체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청탁금지법' 등 정책 홍보

- 행동강령 상담, 청렴시책 및 홍보자료 즉시 전파 등으로 활용
- 외부고객은 애로사항 및 부패 개선의견 접수 창구로 활용

- 지속적인 청렴 노출을 위한 '**청렴웹진**' 정기적 발행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메일, 청렴게시판 등에 게시로 청렴시책 전파

○ **웹툰**을 통한 청렴교육의 접근성 강화

-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주요내용을 주기적(매월)으로 연재·홍보
  - \* 내용 : 금품 등 수수 배우자도 안돼요!, 주는 사람도 처벌 받아요! 등
- 내부전산망(업무포털 등), 영상장치, 소식지 등 활용

□ **기대효과**

- 비윤리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적절한 보상으로 실질적인 부패예방 효과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경영체계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활동으로 내·외부 구성원들에 인식의 변화 도출
- 직원들의 청렴수준 향상을 통해 부패행위 감소로 부패로 인한 기업의 유·무형 손실의 감소

## 8 리더 투명성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실천 유도

### □ 추진배경

- 반부패 교육 결과 대한민국은 반부패 제도 최선진 국가로 판단됨
  - 국내 반부패 관련 제도와 법안, 신고제도 접근성(오프라인, 온라인, 스마트폰 앱),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제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정부)를 중심으로 250여개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제도 운영
- 그러나 새로운 법과 다양한 규제를 제정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실제 법안의 실현과 운영에 대한 검토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선진 국가는 부패신고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나 국내에서는 자신의 이익(보상금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 의식 개혁이 더욱 필요함
- 공단 청렴정책 담당자로서 매년 새로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 □ 교육 내용

- 주요 내용

강의제목	주요내용
1. 반부패 총론	- 부패의 정의? ·사익(私益)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 - 4대 핵심 반부패 추진 전략 : 예방, 교육, 규제, 협력 - 국제 주요 반부패 연혁 ·국제 투명성 기구(TI) 창설(1993)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개발(1995) ·국제연합 초국가 조직 범죄 방지 협약(UNTOC, 2003)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UNCAC, 2005)

강의제목	주요내용
2. 공공부문 조달(public procurement)의 취약점과 모범사례	- 공공 조달의 주요 취약분야 : 인프라 건설, 의료기기, 군수 - 국제적 공공부문 조달 반부패 노력 ·UN국제상거래위원회 모델중재법 제정 ·국제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EU 공공조달 규정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UNCAC) - 반부패 예방 전략 ·규정 제정 및 조달시스템 구축 ·부정당기업 제재 조치 ·공공조달 담당자의 전문화 및 투명성 강화
3. 한국과 서구 국가의 반부패 정책 비교	- 대한민국 투명성 강화 노력 ·국가청렴위원회 설립(2002) ·공무원행동강령 제정(2003)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 강화(2008)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정(2010) ·부정청탁 및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강화(2015) - 반부패 정책의 변화 ·처벌 → 예방 ·공공 → 민간 - 서구 국가의 반부패 문화 ·금품 수수 : 미국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파면) ·회합이나 행사 : 간단한 음료와 식대는 각자 부담 ·운영 경상비, 접대비 : 최소화 ·부당 노동행위 : 절대 없음 ·경조사 : 공동으로
5. 윤리 경영	- 윤리적 딜레마란? ·심각한 부정부패, 사기 등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일을 하기 위해 직면하는 상황들 -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요소 ·윤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인식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제와 통제 강화 - 윤리경영에 대한 2가지 접근 ·원칙(Rule) 중심 : 금지·제한, 부정적 접근, 세세한 규정화 ·가치(Value) 중심 : 독려, 긍정적 접근 - 윤리경영 실천방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규제

## □ 기관 적용 방안

- 리더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 구체화
  - 공개 예시

<감사실장 0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자	목적	장소	대상자/인원	집행금액
16.3.2	업무협의	인더키친	글로벌협력팀직원 / 5명	65,000원
16.3.8	업무협의	한우한마당	석탄공사 감사실 직원 / 6명	153,000원

- 간부급 직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실시
  - 간부직원(본사 각 단·소·실장 및 팀장, 지사장 및 지사팀장)의 행태,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 위험도에 대한 평가
- 부패영향평가 업무표준 제정 및 대상 사규 확대(31개→73개)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규 및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관련 사규를 대상에 포함
    - 회계, 계약, 영업, 건설, 자산관리,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잦은 부패사건 연루·문책요구 업무 등 관련 사규
- 청렴 장학퀴즈 실시
  - 목 적 : 정부 및 공단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숙지도 제고
  - 주 기 : 월 1회(국정감사 등 기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실시방법 : 내부 그룹웨어 '설문조사' 기능 활용
  - 퀴즈내용 : 공단 내부규정에서 청렴·반부패 관련 사례 중심
- 청렴식권제도 도입
  -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직무관련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
  - 「임직원행동강령」에 관련조항 신설 예정

## □ 기대효과

- 조직 의사결정권자인 리더의 투명성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개인 청렴성 평가를 통한 청렴실천 유도
- 부패영향평가 대상사규를 확대 시켜 사규 제·개정 시 담당자 및 소관부서의 자의적 해석이나 부패요발 요소 예방
- 접근성 높은 그룹웨어를 활용하고 퀴즈형식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강령 및 반부패 제도의 이해 및 실행력 제고

<b>붙임</b>	<b>참가자 현황</b>
-----------	---------------

번호	소속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부이사관	○○○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서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주무관	○○○
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주무관	○○○
5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
6	관세청	감찰팀	사무관	○○○
7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문형운
8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사무관	○○○
9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사무관	○○○
10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주무관	○○○
11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	○○○
12	국민연금공단	감사실	대리	○○○
13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	차장	○○○
14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대리	○○○
15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	과장	○○○
16	한국동서발전	감사실	차장	○○○
17	한국철도시설공단	윤리창의부	과장	○○○
18	한국남동발전	감사실	차장	○○○
19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차장	○○○
20	한국감정원	감사실	과장	○○○
21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과장	○○○
22	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대리	○○○
2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감사실	과장	○○○
24	강원랜드	감사실	과장	○○○
2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	대리	○○○
26	한국광해관리공단	감사실	주임	○○○